

창사 69주년에 부처

호남 언론의 종가(宗家),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사 69주년을 맞습니다. 1952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고(呱呱)의 성(聲)을 울리며 태어난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언론의 선구자로서 지역민과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 혁명 등 격동의 물결을 헤치며 현대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예순아홉 성장(星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넘어야 했던 역사의 파고(波高)가 그만큼 거세고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슬한 도전과 역경에도 광주일보가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올곧게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창사 69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앞에 놓인 가장 절실한 과제는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대량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 백신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재확산의 위험 요소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

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 접종 속도를 높이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아울러 공공 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감염병 재난으로 타격이 큰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이나 사회보장 등 사회 안전망 확충도 빠놓을 수 없겠지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광주·전남 지역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정치권에는 격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까지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와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막강한 의회 권력까지 통째로 장악하며 180석의 절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압도적 표 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며 심각한 민심 이반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남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衆論)입니다. 스피드셋 차체에 걸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을 누르지 못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과 청와대 및 여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매몰돼 민생과 국민 통합을 소홀히 한 채 실정을 돌보이 하려서 20·30대 유권자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완패에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질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권 재창출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네 번째 '민주 진영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호남 유권자들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호남의 재도약’ 광주일보가 함께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맹성(猛省)이 요구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계하 받아들여 자성의 계기로 삼는 한편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일색으로 초·재선이 대부분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당 혁신의 최전선에 나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연대와 도전으로 호남 정치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정치도 정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광주·전남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자본과 인구 및 일거리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지방은 외려 쇠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가 지

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행정·경제 통합이나 메가시티 구축 등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충청권도 논의가 한창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년 6개월의 용역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연대와 상생의 지혜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광주·전남 갈등의 핵심 요인이 되어 온 만큼 양 시도는 상호 윈윈(win-win)의 해법을 찾기 위해 두 손을 마주 잡아야 합니다. 최근 국무조정실 주도도 정부 부처와 양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꾸려져 해법 논의를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말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18 3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고, 5·18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루빨리 미완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산포럼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당락 폭이 아주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라님(국민)들은 왜 민주당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지역 투기로 재산을 불린 것은 몹시 나쁜 일이다.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회 전체의 부동산투기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강남의 노후 아파트 가격은 켄쌌게 오르고 있다.

투기 거품(speculative bubble)은 비누방울 거품처럼 만들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다. 그래서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남 투기 공화국은 철옹성이다. 투기 세력이 정치에 미치는 힘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이미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현 집)과 신규 주택(새 집)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므로 구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도시

부동산투기와 정치

건설 정책은 지금 당장 실수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공급수단은 아니다.

강남의 현 집값을 잡는 것은 간단하다. 강남의 집값이 틀림없이 내린다는 확신을 다주택자들에게 주면 된다. 문 대통령의 작년 초 ‘부동산 시장 원상복구’ 발언의 의미가 투기의 온상인 강남 지역의 집값을 2017년 임기 초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주택 투기꾼들이 거품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야 그들이 투기 수요자가 아니라 현집 공급자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실수요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살 수 있어야 강남에도 거품이 사라지는 투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 후세에 ‘이명박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었다는 후평까지는 듣지 않을 만한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 2011년 이명박 시절에 등록제를 시작하여, 박근혜 정권이 2015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자에게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특혜’를 1주택 임대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취득세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혜택 종류도 늘렸다. 그야말로 ‘이명박론’ 3대에 걸친 주택 투기 우대법이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작년 8월 단기임대의 경우, 4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50만 명 이상의 등록임대사업자(2020년 3월 현재 등

록된 임대주택 수 157만 호)에게 여전히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 등록 다주택자들에게는 1인당 매년 세금 특혜 외에 시세차익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다. 좋은 의사는 코로나19가 됐든 다른 병이 됐든 일단 진단을 잘못했으면 아는 즉시 처방과 치료 방법을 바꾼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소급 입법’ 운운하는 것은 불로소득자를 보호하는 방패 공작이다.

둘째, 재건축 가능 시기를 완공 후 50년 이상으로 늦추라. 박근혜의 ‘초이노믹스’(최경환)에 의해 종전 이명박까지의 40년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하지만 50년 이상으로 하면 토건족 이명박 때보다 조금은 나라님을 더 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값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지방은 물론 서울 강남의 ‘새 집’보다 몇 배 더 비싸게 된 ‘강남 투기 공화국’은 이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세금 정책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수도권 전문가로 교체해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음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여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라의 주인인 나라님들을 알잡아 보고, 세습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다주택 투기꾼들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자들은 고위직 관료든 국회의원이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경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촛불 정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나!

無 等 鼓



지난해 5월, 광주시 동구 장동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 강연군 화백의 ‘하늘과 땅 사이-5’ 전시회에는 40년 전의 먹막한 기억을 꺼내 목탄으로 그린 작품 일곱 점이 선보였다. 시신을 수레에 끌고 가는 두 사람, 총탄 자국이 난 광주주유국 우체통, 양동다리에서 마주친 공수부대원, 무명영사의 관, 눈에 처박힌 시민군 버스 등.

전시장을 둘러보다 어느 작품 앞에 이르니 차마 발을 떼기 어려웠다. 시민군 박용준의 마지막을 그린 ‘박용준의 피’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진압 작업이 끝난 후 일부러

‘박용준 투사회보체’가 순수한 시민 모금물로서 디지털 글꼴로 제작된다. YWCA와 광

주요(路), (사)들불열사 기념사업회가 공동 제안한 ‘박용준 열사 글꼴 제작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5월 27일 마감하는 프로젝트는 2000만 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잡았다. 시민 모금의 모금 플랫폼 ‘상상트리’(www.socialfunding.or.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강 화백의 목탄화와 ‘투사회보’에 담겨 있는 박 열사의 오일정신이 새로운 디지털 글꼴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1980년 5월, 박용준(당시 24세)은 광주 YWCA 신협 직원으로 일하며 저녁에는 ‘들불 야학’에 참여했다.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던 당시에 들불야학 팀은 5월 21일부터 광주 참상을 알리는 소식지 ‘투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투사회보체 글꼴

시니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은 본래 사회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인생관, 생활태도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생활양식’을 뜻한다. 최근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목표는 한마디로 ‘가능성의 시니어(The Age of Possibility)’로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사회의 주역에서 물러난 존재가 아니라 새 시대 성장 동력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구적 관점’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가능성의 시니어’라는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국내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의 현 주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놀라워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생각보다 기대수명이 늘고, 몸은 더 건강하며, 늘어난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 보다 자기다움을 추구하려는’ 진지한 탐색들이 늘고 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시니어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가능성을 가진 모습일 수 있다. 단서는 ‘웃차림, 곁을 걸어, 지니고 있는 소지품,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대기하는 모습, 얼굴의 인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시니어를 주역에서 물러난 존재로 바라보면 안 된다. ‘가능성의 시니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성·농협경주교육원 교수

기 고

영광 물무산 행복숲 걷기

크게 변화하고 있다. 만남 자체가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사람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이다. 신체와 마음 건강은 유기적이라 어느 하나가 불만이라면 온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건강 유지에 걷기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 만점인 운동이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이다. 특히 식사 후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식후 올라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걷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매 회 3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같은 걷기라도 영광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경사가 없어 혼자서 물론 가족,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좋은 보배의 숲길이다.

영광의 남동부에 위치한 물무산(259m)은 수원이 풍부해 붙여진 지명이다. 영광을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탁월하다. 그곳에 2018년 3월에 준공된 행복숲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힐링 장소다.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을 비대면 관

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 6만 명이었던 이용객이 2020년에는 12만 명이 이를 정도로 영광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무산 행복숲은 입·출구를 정해놓고 단순히 걸어나오는 기존의 숲길과 달리 숲의 기능은 보존하면서 곳곳에 숲속 둘레길 10km, 질척질척 맨발 횡갯길 2km, 유아 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소나무 숲 예술원, 하늘공원 등의 힐링 체험 공간을 갖춘 종합 산림 복지숲이다. 특히 산중턱에 조성된 숲속 둘레길은 산 정상이나 아래보다 피톤치드가 풍부해 이용객들이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다. 주말이면 광주 지역 등에서 도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을 위해서는 휴식·휴양을 위한 도시 숲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해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국민 2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상적으로 생활권 숲을 자주 이용할수록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원거리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의 물무산 행복숲을 찾아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은 코로나 시대 건강 행거기의 으뜸이 될 것이다.



홍석봉
영광군 부군수

최근 뇌졸중으로 힘들어했던 지인의 이야기다. 갑작스런 병환으로 당황하던 차에 영광읍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물무산 행복숲에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경사가 없고 함께 걷기에 적당한 너비를 유지하고 있는 길을 걸으면서 건강이 한결 나아지는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달로 많은 움직임이 필요치 않게 됐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각종 질병이 시달리게 됐다. 노약자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경사가 없는 평지형 숲길은 작은 움직임으로 건강을 선사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32 경계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일부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